

정책브리핑



정책브리핑 | 2022-40호 | 2022년 11월 11일 | 발행처 민주연구원 | 발행인 노웅래 | idp.theminjoo.kr

민주적 통제를 위한 감사원 개혁 방안

-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립

김 석 동 연구위원(정치학 박사)

《요약》

■ 상황인식: 감사원의 정치감사·표적감사를 통한 문재인 정부 정치보복

- 정권교체 이후 감사원은 정치보복과 문재인 정부의 업적 지우기에 나서고 협치를 훼손
- 이전 정부에 비해 현 감사원의 정치보복 행태가 심화한 근거: (1) 대통령·여당의 개입, (2) 감사 규모와 범위 증가, (3) 감사 권한의 남용, (4) 검찰과의 공조, (5) 대통령실 종속 심화, (6) 장관 급 인사 사퇴 압박, (7) 야당 관련 표적 감사와 달리, 10·29 (이태원) 참사와 대통령실 이전과 같이 대통령·여당 관련 사건에는 감사 소극적

■ 문제점: 감사원의 독립성·중립성 침해, 그리고 민주적 통제 약화

- 1)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되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음
- 2)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약화: 대통령의 권력 집중으로 감사의 합리성 저하
- 3) 감사원 내에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 통합으로 정치권력화 강화, 전문성 약화

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개혁방안

- 1) 제1안: 감사원의 독립기관화
 - 감사의 공정성을 위한 제1안은 감사원의 독립기관화. 2안은 국회 소속. 3안은 감사원 내부 제도개혁.
 - 제1안과 3안의 결합, 또는 제2안과 3안의 결합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최대화할 수 있음.
 - 감사원 내에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을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.
- 2) 제2안: 감사원(회계검사원)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
 -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면 재정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하는 장점도 있지만, 국회 제1당의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도 있음.
- 3) 제3안: 감사원 내부 제도개혁
 -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인선 절차에 국회 동의에 따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, 인선에 시민 전문가 추천제도를 도입할 것.
 - 국민감사청구제로 국민이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,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감사를 받는 자가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할 것.
 - 감사의 합리성 보장을 위해 감사위원회는 다양한 결과를 정부와 국민에게 제시할 것.

▶ 키워드: 감사원, 민주적 통제, 독립성, 정치적 중립성

♣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,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
1. 상황인식: 감사원의 정치감사·표적감사를 통한 문재인 정부 정치보복

○ 정권교체 이후 감사원은 정치보복과 문재인 정부의 업적 지우기에 나섬

- 한국의 감사원은 진영 간 정권교체 시기마다 ‘정치감사·표적감사’, 중복감사 등 논란을 야기.
 - 국민과 학계의 감사혁신 요구는 대체로 “독립성”과 “정치적 중립성”의 강화(김선화 2015).
- 감사원은 ‘정치감사·표적감사’로 문재인 정부의 업적 지우기에 나섬.
 - 탈원전 정책, 태양광 사업, 북한 어민 북송, 서해 공무원 피살,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감사.
 -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[공수처]와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예고.
 - 감사원은 2022년 9월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‘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’ 관련 서면조사 통보.
- 윤 정부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관급 인사 사퇴를 압박.
 -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재직 중인 공공기관(국민권익위원회, 방송통신위원회 등)에 대해 6-7월에 전격 감사에 착수. 특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진행.

○ 이전 정부에 비해 현 감사원의 정치보복 행태가 심화한 근거

(1) 대통령·여당의 감사개입

-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월 16일에 장관급인 기관장 두 명(권익위, 방통위)의 사퇴를 전방위로 압박. 윤석열 대통령도 6월 17일 이에 가세. 닷새 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.
- 한덕수 총리는 6월 말에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(KDI)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인 ‘소득주도성장’ 정책을 주도한 인사이므로 퇴진을 요구. → 감사원이 감사를 위한 회계와 인사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자 홍 원장은 임기를 2년이나 남긴 채 사퇴.

(2) 감사원의 감사 규모와 범위 증가

- 현장감사는 보통 3주 만에 끝나지만, 방통위 감사의 경우 5개월 이상 진행 중. 3년 전 정기감사 때는 10명이었지만 방통위 담당이 아닌 감사관들까지 포함해 감사 인력만 15명 안팎.
- 감사 범위에서도 감사원은 해양경찰청(해경), 국방부, 중앙선거관리위원회(선관위), 방송통신위원회(방통위), 행정안전부, 병무청 등 전방위적인 감사.

(3) 감사 권한의 남용

- 감사원은 감사방해죄 규정한 감사원법 제51조를 ‘전가의 보도’처럼 휘둘러 감사 권한을 남용함.
- 반면 검찰과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마저 법원의 견제를 받고 엄격한 요건 안에서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하지만, 감사원은 다른 사정기관인 검경과 달리 견제를 안 받음.

(4) 감사원의 감사에 뒤이은 검찰의 수사로 감사원은 검찰과 공조함

-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하여, 감사원은 고인이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기점으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발표.
 - 검찰은 10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.
-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최근 감사원 임직원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탈(脫)원전 정책과 관련된 원전 1호기 재판과 관련해 검찰에 도움을 주라고 지시.

- 이러한 행태로 감사원은 국정운영 지원기관을 넘어 검찰수사 청부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고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다는 의혹을 받음.

(5)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 종속 심화

- 최재해 감사원장은 7월 29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감사원은 “(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) 지원하는 기관”이라 발언.
- 감사원의 최근 조직 개편에서 국민감사본부 및 미래전략감사국 신설과 같이 감사원 전체 인력의 4분의 1이 감사원장의 ‘특별 지시’에 매달려서, ‘표적 감사’에 중점을 둔다는 의혹을 받음.
-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제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감사 수요가 늘었다는 이유로 국민감사본부를 신설했지만, 감사위원회의 통제를 벗어난 표적감사의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.

(6) 이전 정부에서 임용된 다수의 장관급 인사가 사퇴 압박을 받음.

- 사퇴 압박을 받은 인사들은 권익위, 방통위, KDI 등의 수장들을 포함.

(7) 야당 관련 표적 감사와 달리, 10·29 (이태원) 참사와 대통령실 이전과 같이 대통령·여당 관련 사건에는 감사 소극적.

-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착수한 바와 달리,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10·29 (이태원) 참사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음.
- 참여연대가 11월 8일 ‘용산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’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자, 감사원이 자료 보안을 요구해 기각을 위한 명분쌓기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.

→ 국민감사청구제는 직권남용이나 예산 낭비 등의 부패 의혹이 있어도 국가기관이 나서지 않을 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나, 보완 요구는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는 조치임.

○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적 표적 감사로 협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야기

-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감사원은 윤 대통령과 여당에 비해 야당(문재인 전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)에 무차별적이고 편파적인 표적 수사를 진행. 이는 정치보복으로 해석됨.
-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는 여당과 야당 간의 협치를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위기를 야기.

2. 문제점: 감사원의 독립성·중립성 침해, 민주적 통제 약화,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통합

1)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되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음

- 감사원의 목적: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인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인 감사원으로 하여금 정부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제도화(공병천 2010, 43).
- 한국 헌법과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직무에 관해 ‘독립 지위’를 보장하지만, 감사원을 “대통령에 소속”되도록 규정함.
- 감사원의 대통령 소속으로 정권교체 이후에 감사원의 감사업무는 때때로 정권에 편향됨. → 감사에서 정권의 눈치 보기 관행이 이어짐(송병춘 2022).

-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 문자메세지로 연락한 것은 ‘독립기관’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 참모에 업무보고: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.
 -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아, 대통령과 원내 제1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 간의 관계가 경색되어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훼손됨.
-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이어서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고,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서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움(김건오 2021; 아래 헌법 제97조 참조).

※ 참고: 헌법과 감사원법의 조문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은 밑줄로 표시.

대한민국 헌법 제4관 감사원

제97조 국가의 세입·세출의 결산,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.

제98조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
감사원법

제2조(지위)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,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.

- 해외 국가 사례: ‘선진국 클럽’이자 민주주의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OECD(경제협력개발기구) 34개국 중 감사원을 행정부 소속으로 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2개국에 불과함.
 - 그 2개 국가 중에서 감사원을 대통령·행정부 소속으로 한 국가는 스위스임. 스위스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지도 않아서 감사원은 사실상 강력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음(김선화 2022).
 - 국정운영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(예: 미국, 프랑스) 중에서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인 경우는 한국이 유일함.
 - 다른 국가는 감사원을 입법부·행정부·사법부 3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둬(17개국, 예: 독일). 아니면, 의회 소속 또는 의회와 연계함으로써 대의기관의 감독을 받음(15개국, 예: 미국).
- 감사원 개편과 관련한 주요 논의들은 크게 행정부 소속의 현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거나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으로 구분됨(양지숙 2017, 21).

2)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악화: 대통령의 권력 집중으로 감사의 합리성 저하

- 대통령의 감사원 통제로 국민의 감사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악화. 따라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정치 권력화를 예방하여 정치개입과 정치보복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.
- 국민의 수임기관으로써, ‘주권을 가진 국민’을 대신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의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받고, 감찰하는 기관임(송병춘 2022).
- 최재해 감사원장의 “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”이라는 최근 발언이나 감사원 사무총장의 대통령실 비서관에 대한 보고는 국민을 대신하여 감시하는 역할에 위배.
- 감사원의 대통령 소속으로 대통령제 권력 집중: 한국의 대통령은 인사권, 예산권, 정책결정권, 법률안 제출권, 감사권, 개헌안 발의권을 포함한 초강력 대권을 가짐.

→ 제왕적 대통령제로 퇴행할 가능성 ↑.

- 대통령의 권력 분산 방안: 입법권, 인사동의권, 감사권은 의회로 옮겨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혁할 필요가 제기(박명림 2022) → 분권화된 민주적 대통령제 실현.
- 감사원은 현재 권력인 대통령에 편향되어 감사의 공정성을 해쳐 감사의 합리성 저하.

3) 감사원 내에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 통합으로 정치권력화 강화, 전문성 약화

- 진단: 한국의 감사원은 (스위스를 제외하고)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감사원과 달리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.
 - 스위스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일 뿐 행정부 수반이 아니므로 권한이 약하여 감사원이 행정부로 부터 자율성을 가짐. 스위스는 작은 국가이므로 한국과 비교 가능한 사례가 아님(김선화 2022).
 - 인구가 많은 대국이자 민주주의의 질이 높은 국가들에서 감사원은 직무가 분리되어 있음.
-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: (1) 감사원이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용이하게 감사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음. (2) 회계검사를 한 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재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담보.
- 기능 통합의 문제점 1: 감사원의 과도한 감사 기능과 감사 권한으로 민주적 통제가 곤란함.
 - (1) 감사권한 남용: 피감기관에 대한 ‘갑질 감사’, ‘표적 감사’, ‘기관 운영감사(종합감사)’, ‘상시공직 감찰(복무감사)’은 피감기관의 운영을 마비. → 감사원 관료들의 피감기관에 대한 전방위적 청탁.
 - (2) 감사원의 정치권력화로 의회·시민사회·여론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곤란함: 회계검사 기능까지 권력적 작용이 되어 민주적 대표성이 없는 감사원이 의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재정을 통제.
 - (3) 직무감찰 기능에 기반하여 강력한 권한을 발휘하므로 정치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음.
 - 직무감찰은 권력적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그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시정 요구를 한다거나, 비위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등 직무감찰에 치중(송병춘 2022).
 - 표적감찰: 중앙집권화된 국가감찰기구로서 감사원은 권력 실세의 눈 밖에 난 공공기관장이나, 선출직 단체장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 쉬움.
- 기능 통합의 문제점 2: 성과감사의 전문성 약화, 감사행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음.
 - (1) 직무감찰 분야로 감사가 집중되면 정책사업의 효과성, 효율성, 경제성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는 성과감사에는 소홀.
 - (2) 감사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: 감사원의 감사대상의 불합리한 선정, 방대한 자료요구나 출석요구, 직무감찰 분야에로의 감사 집중과 같은 감사 편의주의(송병춘 2017, 2022).

3.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개혁방안

1) 제1안: 감사원의 독립기관화

○ 감사의 공정성을 위한 제1안은 감사원의 독립기관화. 2안은 국회 소속. 3안은 감사원 내부

제도개혁

- 감사원의 독립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통해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므로 독립기관화가 최선. 차선은 감사원의 국회 소속임. 소속을 변경 못하면 내부 제도개혁이 필요(윤성식 2020).
- 제1안과 3안의 결합, 또는 제2안과 3안의 결합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·중립성을 위한 민주적 통제를 최대화할 수 있음.
 -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에 감사원의 독립기구화가 포함되었음.

※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(2018)에서 “제7장 감사원” 관련 주요 내용:

제114조

②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.

제115조

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,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. ② 제1항의 감사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,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. ③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. ④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. 다만,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임기는 감사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⑤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 ⑥ 감사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.

- 비판: 대통령 소속에서 벗어난 감사원이 독립성·중립성은 담보할 수 있지만 감사대상기관 특히 행정 각부에 대해 감사업무의 효과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.
- 해결책: 감사업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(김중권 2017).

○ 감사원이 독립된 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함으로써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율성 보장

-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는 두 방안: (1) 회계검사원과 감찰원 각각을 헌법기관으로 분리하는 방안, (2) 회계검사기능과 직무감찰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기관 설치(양지숙 2017, 21).
 - 2014년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및 회계검사 기능을 분리하여 각각 감찰원, 회계검사원으로 독립기관화 하는 방안을 제안.

○ 감사원 내에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을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

- 감사원의 직무감찰 및 회계검사 기능을 분리하여 각각 감찰원, 회계검사원으로 독립기관화.
- 기대효과: (1) 정치권력화를 방지하고, (2) 감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약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(3)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(양지숙 2017, 41).

2) 제2안: 감사원(회계검사원)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

- 방법: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만을 국회로 이전하고 직무감찰은 행정부 내부에서 담당.
- 기능: 감사원은 행정부에 대한 효과적 견제를 바탕으로 국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.
- 장점: 재정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며 국회의 예결산 심의권 및 감사권을 강화하여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(김건오 2021).

- 한계: 1) 한국 정치구조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,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음 → 국회 이관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(김성준 2017).
2) 국회 제1당의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(양지숙 2017, 21).
- 해결책: 감사원(회계감사원)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당들이 감사원을 지원하기 위해, 여당과 야당 간의 협치를 도모하는 합의 지향적 정치제도를 강화할 필요.

3) 제3안: 감사원 내부 제도개혁

- 감사원의 소속 변경은 개헌이 필요하므로, 여당과 야당 간의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시일이 걸림. 반면 감사원 내부 제도개혁 중의 일부는 개헌으로 일부는 법률제정으로 실행 가능.

○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인선 절차에 국회 동의에 따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

- 감사위원 임명방식 개선: 현행 헌법에서 감사위원 임명에 감사원장의 제청이라는 형식적 절차가 존재하나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여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(김종철 2008, 521).
 - 감사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크므로 감사위원의 임명에도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며, 독립적인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위원을 선출할 수 있음(양지숙 2017, 64).
-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제2117347호(2022. 9. 14.))(대표발의: 민주당 신정훈 의원): 감사원의 핵심적 기능은 행정부 활동을 감시하는 일이므로 대통령으로부터 인사가 독립될 수 있도록 감사원 공무원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함(안 제18조).
-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.
 -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, 정치적 목적의 감사와 희생양을 찾는 표적 감사는 공직자 소신 행정과 적극 행정을 위축시켜 국민의 피해로 귀결.

※ 감사원법 개정안(제2117347호), 즉 ‘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’의 주요 내용: (1)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, (2)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, (3) 감사원 공무원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, (4) 감찰 금지 사항에 정부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(옳고 그름) 추가, (5) 특별감찰 시 감찰계획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 및 승인, 감사 결과 국회 보고

○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인선에 시민 전문가 추천제도를 도입할 것

- 국회 동의나 원장 제청 전에 시민사회나 전문가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-3배수 후보를 압축하고 그 후보군에서 대상자를 동의 또는 제청토록 강제함(차재원 2022).

○ 국민감사청구제로 국민이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할 것

- 감사원 임직원이 법 위반 또는 부패로 공익을 해한 경우, 국민감사청구제를 통해 국민의 연서로 공공기관 사무처리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여(차재원 2022) 민주적 통제를 강화.

○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감사를 받는 자가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할 것

- 헌법상 형사 피의자,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, 체포·구속·압수·수색

은 감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하는 등 절차상 권리가 보장.

- 하지만 감사원법에는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(이재영 2022).
-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감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.

○ 감사의 합리성 보장을 위해 감사위원회는 다양한 결과를 정부와 국민에게 제시할 것

- 감사의 합리성 보장을 위해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.
- 감사위가 1개의 결론을 도출하지 말고 ‘1순위 다수 의견, 2순위 소수 의견’을 제시할 것.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여, 정부에 선택을 맡기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함(윤성식 2020).
- 왜냐하면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에서 주관이 작용할 수밖에 없으므로, 하나의 정답을 도출하려고 하는 정책 감사는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정치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.
-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에서 벗어나 독립성·중립성이 보장되면 감사 과정의 합리성이 개선됨.

<참고문헌>

-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. 신정훈의원 등 60인, 제2117347호(2022. 9. 14.). 제400회 국회(정기회).
- 공병천. 2010. “한국, 미국, 프랑스 최고감사기구에 관한 비교론적 고찰.” 『국가정책연구』 24권 3호.
- 김건오. 2021. “국회의 결산 심의 및 감사권에 관한 연구: 주요국 입법례 분석을 중심으로.” 『예산정책연구』 10권 1호, 1-42.
- 김선화. 2015. “감사원 혁신과 입법개선과제.” 국회입법조사처. 『이슈와 논점』 974호.
- 김선화. 2022. “외국의 감사원의 역할과 업무체계.”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.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. 2022/10/19.
- 김성준. 2017. “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개혁 방안 토론문.” 참여연대. “감사원,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?” 토론회자료집. 2017/07/12.
- 김중권. 2017. “감사원 개혁 시 간과하면 안될 논의들.” 『한국경제』 2017/03/06.
- 박명림. 2022. 발표문.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- 정치개혁 왜 필요한가. 2022/09/02. 인용: 한겨레신문. “조강력 대권 지닌 한국 대통령…감사원은 국회 소관으로.” 2022/09/15.
- 송병춘. 2017. “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개혁 방안.” 참여연대. “감사원,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?” 토론회자료집. 2017/07/12.
- 송병춘. 2022. “공공감사(직무감찰) 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.”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.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. 2022/10/19.
- 양지숙. 2017. “국가감사제도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주요 이슈분석.” 감사연구원. 연구보고서 2017-009. 5월.
- 윤성식. 2020. 인터뷰: ““감사원장 생각은 마지막까지 노출 않아야”...文이 찍은 ‘감사원 개혁 적임자’ 일침.” 『한국일보』 2020/08/04.
- 이재영. 2022. “감사원.” 김광현·김진태·박은정·류호연·박혜림·이소영·이재영·김선화·이구형. 『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I』. 국회입법조사처(국회운영위원회, 법제사법위원회). 연구 보고서. 2022/08/02. 84-91.
- 차재원. 2022. “감사원 개혁, 국민 스스로 감사 된 심정으로!” 『스픽스(SPEAKS)』 2022/09/19.